

洪錫律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이승만정권기 반공이념 교육과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

2007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歷史教育專攻

朴海敬

이승만정권기 반공이념 교육과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

洪錫律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6년 12월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歷史教育專攻

朴 海 敬

認 准 書

朴海敬의 碩士學位 논문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논문개요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은 우리 민족은 자주적인 민족교육 기회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미·소 군정의 주둔과 함께 시작된 미군정체제 안 ‘미국식교육제도’의 무분별한 도입과 민중들의 교육개혁에 대한 열망을 무시한 ‘현행질서의 유지’의 방침 아래 식민지의 교육체제를 답습하여 민족 자주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할 수 없었다.

교육개혁은 신탁통치를 둘러싼 좌·우익의 대립으로 인한 구조적 취약성과 불안정성이라는 조건을 안고 세워진 단독정부에서도 실현될 수 없었다. 오히려 이승만 정권은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반공’이념을 도입하였고, 이것은 학도호국단 설치, 교원 재교육을 통한 사상통제, 군사훈련 실시와 같은 교육에 대한 통제로 이어졌다. 건국 이후 발발한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반공이념은 공식적인 국가통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정부는 노골적으로 반공이념을 교육에 주입하였고 이것은 문교정책과 장학방침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전쟁이 끝난 이후 발표된 문교정책과 장학방침을 보면 반공·도의교육 강화, 과학기술교육, 건강·보건교육의 강화를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교과에서도 강조되었는데 특히 사회생활과, 역사, 시사교육에서 부각되었고, 국가가 직접 수업에서 다뤄야 할 내용까지 통제하고 있어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과목 역시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것은 특정사실에 대한 은폐·왜곡 등으로 나타난다. 일제

하 독립운동사에서 사회주의세력이 배제된 서술, 해방 이후 이데올로기적으로 극한 대립을 했던 신탁통치 문제에 대한 우익 입장 위주의 서술, 분단 정권 수립에 있어 책임을 좌익세력과 소련으로 전가하는 서술, 한국전쟁의 책임 전가 및 휴전협정, 북진통일론과 같은 당시 집권세력의 입장이 여실히 드러나는 서술이 대표적이다.

역사교육 자체가 과거사실에 대한 객관적 해석에 대한 비판과 판단력을 가르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편협한 이념적 입장에서 쓰여진 교과서 서술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고유한 시각을 갖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켰으며, 가치관 형성에 있어 극단적인 사고가 형성되어 졌으리라 생각된다.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한국 근현대사’교과의 내용을 살펴볼 때, 1차 교육과정 당시 역사교과의 서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서술을 보인다. 이는 아직까지 역사교육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왜곡된 역사서술과 같은 이념적 그늘에서 벗어나 다양한 역사인식과 역사서술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사회의 보편적 가치이자, 역사교육이 이루어야 할 중요한 사회 목표인 평화, 평등,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에 한걸음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반공이념 교육정책의 형성 및 강화	4
1. 미군정기 반공교육	4
2. 이승만정권기 반공교육	9
III. 역사교과서 서술과 반공이념	20
1.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 서술과 이념문제	22
2. 해방 직후 신탁통치 문제	31
3. 분단정권의 수립과정 서술	37
4. 한국전쟁과 북진통일론	42
V. 결론	56

참 고 문 헌

Abstract (영문초록)

I. 서론

해방 후 남북 분단과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상황에서 ‘반공’은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배이념으로 대두되었다. 반공이념은 단순히 반(反)공산주의가 아닌 국가지배체제에 반대되는 모든 이념을 배제하는 실질적인 국가통제의 이념으로 자리잡았다.

역사교육 역시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의 일반적 목표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른바 ‘바람직’하다는 가치판단은 당대의 정치적 가치와 무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 할 수 밖에 없었다.¹⁾ 국가권력은 사회통제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교육에 대한 통제, 특히 교과서 내용에 대한 통제를 가하였다. 다른 어느 교과서보다도 특히 역사교과서는 역사적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 특정한 지배집단의 행동·특권에 초점을 맞추어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한다. 실제 교과서에 실린 내용과 자료는 수많은 학습자료 가운데 선택과정을 거친 것으로 저자가 기대하는 특정한 역사지식이나 역사적 사고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선정작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통제가 이미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²⁾ 이러한 교육 목표·과정의 제정이나 교과내용 선정에 있어 가치판단의 개입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고유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켰으며 가치관 형성에 있어 극단적인 사고를 주입시킬 수밖에 없었다.

현재의 교육도 이와 같은 반공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1994년 3

1) 이신철, 「국사교과서 정치도구화의 역사」, 『역사교육』 97, 2006, 177쪽.

2) 마석한, 「역사교과서와 교과서 분석」, 『실학사상연구』, 1997, 228쪽.

월 발표된 ‘국사교육 내용의 준거안’이 ‘민중사관’에 물들어 북한의 역사인식을 따라 대한민국을 비판하고 있다는 ‘국사교과서 준거안 파동’³⁾이나, 7차 교육과정에 의해 발행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중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반미친북적’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것을⁴⁾ 볼 때,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반공의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않은 듯하다.

이 글에서는 반공이념이 교육정책과 교과서에 본격적으로 주입되는 시기라 할 수 있는 이승만 정권기의 교육정책을 살펴보면서 반공이념이 역사교육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역사교과서의 분석을 통해 의도적으로 배제된 사실이나 왜곡되어 서술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역사교육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대상 교과서는 미군정하에서 발행되었던 유일한 국사교과서였던 진단학회의 『국사교본』과 전시 이후 1차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검정으로 발행⁵⁾되

3) 1994년 제6차 교육과정 「국사교육 내용전개의 준거안」은 그동안 국사교과서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가해졌던 비판을 적극 수용하여, 근·현대사 부분에서 일부 용어를 고치고, 서술 내용을 추가하거나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준거안 시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언론과 정치권, 여러 보수적 단체들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결국 준거안 시안은 종전과 비슷하게 개정이 된 다음에야 확정이 되었다. 김한중, 「국사교과서 연구의 동향2」,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 선인, 2006, 530쪽.

4) 금성교과서에서 발행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이 반미친북적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교과서 내용이 반미친북적이라 주장한 의원의 의견과 이에 대한 금성출판사 교과서 집필진의 입장이 『역사교육』 92, 역사교육연구회, 2004 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5) 검정은 국가의 교과서에 대한 통제수단이기도 하였다. 검정으로 불량한 교과서를 도태시키

있던 중등 사회과 교과서(역사부문)이다. ‘국사’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분석의 범위는 근·현대사 부분으로 일제하 해방운동에서 한국전쟁 이후까지이다. 물론, 반공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발간된 도의교과나 전시상황에 발간되었던 전시교과서 ‘전시생활(국민학생용)’, ‘전시독본(중등용)’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나 본 논문은 역사교과를 주로 분석함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고 질적으로 우수한 교과서를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으나 국가정책, 이념을 뒷받침 하도록 규제하는 측면도 있었다. 문교부장관의 행정조치인 “교과서 사용에 관한 문교부 통 칙” (1949.7.11)은 이미 검인정된 교과서라도 재검하여 국책 추진에 방해가 되는 교재를 취소하거나 해당부분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박진동, 「해방후 역사교과서 발행제도의 추이」, 『역사교육』 91, 2004, 30쪽.

Ⅱ. 반공이념 교육정책의 형성 및 강화

1. 미군정기 반공교육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이하여 일제하의 식민잔재를 청산하고, 자주적인 통일민족국가를 수립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민족 지도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수많은 정당, 사회단체들이 결성되었다. 대표적으로 여운형의 ‘조선건국 준비위원회’는 해방 직후 혼란스러운 사회의 치안과 질서유지에 힘쓰면서 자주적 국가수립을 위한 잠재적 역량과 노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노력은 교육분야에도 보여진다. 해방 직후 일부 사립학교 교장들이 모여 ‘공사립교원대회’를 개최한 것과 조선어학회, 진단학회 인사들이 활동 방향을 모색하여 강습회를 개최하는 등, 미군정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민족 지도자’들의 민족교육 회복을 위한 신속한 활동⁶⁾이 있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런 사회적 열망을 무시하고 정치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에서도 ‘현존 통치기구의 활용’, ‘현행질서의 유지’라는 방침을 관철시켰다. 이에 따라 미군정청 학무국은 식민지 교육체제를 답습하는 한편 식민지 교육관료들을 존속시키고, 좌익 또는 민족주의 계열의 교육계 인사와 일선교사들을 배제한 채 ‘조선교육위원회’와 ‘조선교육심의회’라는 자문기관을 조직하여 한국교육

6) 최용규, 『한국사회과에서의 민족의식 교육』, 한국 교원대 박사학위 논문, 1994, 122~123쪽.

의 제도, 이념, 행정의 틀을 잡아나갔다.

또한, 미군정은 교육자들의 민족교육에 대한 요구에 탄압으로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군사점령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여 미군정 3년 동안 남한에서 해직된 교육자 수는 1천 1백명에 이르렀다.⁷⁾ 한편 1946년 3월 30일 ‘무허가 학교 폐쇄령’을 공포하여 민족적이고 진보적 성향의 학교, 학원, 강습회를 폐쇄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문맹퇴치운동마저 금지시켰으며, 이어 1946년 6월 19일에는 ‘국립서울종합대학안(국대안)’⁸⁾을 발표하여 광범한 반대운동을 자초하였다. 국대안 반대운동은 교육에 대한 민족적 요구가 전면적으로 분출되어 나온 것이었으며, 동시에 해방 직후부터 국가권력이 민족적, 민주적 교육 요구에 대하여 폭압적으로 대응하는 실례를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다.⁹⁾

또한 모든 학교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교육이념의

7) 김진경, 「전환기의 민족교육」, 『민중교육2』, 푸른나무, 1988, 13쪽.

8) 국대안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반발을 일으킨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학교 운영상의 최고결정권을 행정관료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갖도록 되어 있어 중앙집권적, 행정적 통제의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교직원 임용방식에 미군정 최고 책임자와 문교부관리로 구성된 이사회가 총장, 교수를 임명하도록 되어있었고, 기존학교의 교수들은 일단 사면 형식으로 전부 해직되고, 국립대에서 재임용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교수임용 방식은 미군정 당시의 좌, 우익 대립양상과 당시 경성대학의 이념적 진보성을 고려할 때, 교육부문에서 극우세력의 헤게모니를 확립하려는 미군정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 해석 할 수도 있다. 김진경, 「분단 이후 반공교육의 전개과정」, 『실천문학』, 1988봄호, 1988, 57~58쪽.

9) 김진균, 홍승희, 「한국사회의 교육과 지배이데올로기」,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녹두, 1991, 228쪽.

제정 역시 같은 맥락에서 실시되었다. 조선교육심의회에서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건국이념이 교육의 근본이념으로 제시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족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백낙준이 제의한 홍익인간은 단군신화에 나타난 사상으로 비과학적인 신화에 가까운 것과 지난날 일본인들이 즐겨 쓰던 팔굉일우(八紘一宇)사상과 비슷하다¹⁰⁾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1949년 제헌의회에서 공포된 교육법 제1조에 반영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홍익인간’이라는 교육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의 외피를 갖춘 고도로 추상적이고 몰역사적인 개념으로, 이것은 ‘단군성조의 건국이념’이라는 점에서 민족주의 정서에 호소되었고, 그 의미를 ‘인류공영’으로 해석함으로써 민주주의 명분에도 부합한다고 주장되었다.¹¹⁾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념의 채택은 해방직후 민족국가의 성립이라는 시대·사회적 요구와 거리가 먼 몰역사성,

10) 홍익인간이 일본인들이 즐겨쓰는 ‘팔굉일우’와 비슷하다는 주장에 대해 백낙준은 일본의 ‘八紘一宇’는 그 나라 제국주의를 합리화하려는 하나의 위장된 문구인데 반하여 ‘홍익인간’은 만인을 이롭게 한다는 매우 인도주의적 사상으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족주의의 이념과도 부합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연정은, 「안호상의 일민주의와 정치·교육 활동」, 『역사연구』 제 12집, 2003, 28~29쪽.

11) 문교부, 『문교개관』, 1958, 4쪽 ; 김진균, 홍승희, 앞의 책, 녹두, 1991, 재인용.

반(半)봉건성, 서구지향적인 보편성을 띠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¹²⁾

해방 직후 미군정하에서 시작된 학교교육에 있어 교사부족은 심각했다. 해방 이후 일본인 교사들이 물러간 것과 더불어 군정 초부터 1946년 4월까지 낮은 봉급과 생활비의 과중으로 인해 교사들의 이직현상¹³⁾이 심한 반면 국민의 교육열과 해외 이주민의 귀환등으로 교육에 대한 수요는 높았고, 이에 교사부족 사태가 야기되었다. 미군정은 기존의 사범학교 강습과 임시 교사양성소 등과 같은 단기간의 약식훈련을 통해 교사인력을 양성하여 교육현장에 투입하거나 일제시대의 교사들을 재교육하여 상급학교 교사자격을 부여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교사재교육은 교육내용으로 미국의 이론과 방법을 소개하고 보급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미국의 대한정책 기본방향(공산화 방지)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기능했다. 이는 당시 부족한 교원수에도 불구하고 반공을 내세워 수많은 교사를 해임시킨 것으로 설명되어지며, 미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반도 내 공산주의 확산저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⁴⁾

새로운 교과서의 발행 역시 시급했던 사안으로 일제강점에 의해 단절되었던 한글로 된 교과서가 소생할 기회를 맞이하였다. 미군정은 우선적으로 국어, 국사 교과서 편찬을 위해 조선어학회와 진단학회를 지원하였으며, 국사 교과서의 경우 1946년 6월 임시교재로 『초등국사』(五,六년용, 군정청 학무국)와 『국사교본』(중등학교용, 진단학회)등을 발간하여, 각 시·군에 속한

12) 박길자, 『교육과정에 반영된 지배이데올로기의 비판적 고찰』,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91, 32~33쪽.

13) 이광호, 「미군정기의 교육」, 『분단시대 학교교육』, 푸른나무, 1989, 33쪽.

14) 이광호, 위의 논문, 43~44쪽.

학교에 배부하였다. 『국사교본』은 당시 중등학교 교과용으로 펴낸 유일한 국사책이었으며, 그 밖에 다른 적당한 국사 교재도 없었으므로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삽화와 지도를 넣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히 쓰여진 주로 정치사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빈약한 임시교재였다.

이렇게 임시방편식으로 급급하게 이루어지던 교육정책은 1946년 9월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교과편제 및 시간배당 기준경이 차례로 발표되고, 12월에는 국민학교 교수요목, 이듬해에는 중학교 교수요목을 설정함으로써 체계를 갖춘 교육을 비로소 실행되었다.¹⁵⁾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군정 정책의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등장한 정치사회화로서의 교육, 사회생활(social studies)과목의 등장이다. 사회생활과는 해방 직후 역사, 지리, 공민으로 나누어져 있던 교과목을 합쳐 통합한 것이다. 그러나 세 교과목의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당시 ‘초등학교 사회생활과 교수요목’에 명시된 것처럼 “사회생활과는 사람과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과의 관계를 밝게 인식시켜 사회생활에 성실, 유능한 국민이 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¹⁶⁾ 역사분야의 목표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양 및 서양에 기여케하며, 나아가 국제친화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는 것이었다.¹⁷⁾ 이처럼 사회생활과와 역사교육의 목표는 당시 미국 사회의 역사교육 목표를 우리사회에 이식한 것이었다. 이것은 미국 교육사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민주시민을 기르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편제

15) 김한중, 「해방 이후 국사교과서의 변천」,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 선인, 2006, 23~24쪽.

16) 이광호, 앞의 논문, 34쪽.

17) 김홍수, 『한국역사교육사』,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2, 183쪽.

되었으며, 또한 지식 중심의 교과 내용이 생활 중심의 교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앞으로 생활중심 교육과정이 도입되어질 것을 알려 주는 것이기도 하였다.¹⁸⁾

식민지를 벗어나 민족국가를 수립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식민사관의 극복과 민족주체성의 확립이 역사교육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것들은 교수요목 및 교과내용에 반영될 수 없었다. 그것은 아직 기초적인 국사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과, 미군정의 통치라는 조건 아래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였다.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해방 직후 역사교육은 일제 식민지 교육에서 벗어나 민족자주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 불완전한 출발일 수밖에 없었다.¹⁹⁾

2. 이승만 정권기 반공 교육

앞서 언급했던 문제점을 품고 출발한 교육은 단독정부의 구조적 취약성과 불안정성이라는 조건을 안고 세워진 이승만 정권에서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고, 오히려 미국식 민주주의의 표면 아래 교육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다.²⁰⁾

18) 이경섭, 『한국현대교육과정사 연구』상, 교육과학사, 1997, 62쪽.

19) 이신철, 「국사 교과서의 정치도구화의 역사」, 『역사교육』97, 2006, 179~180쪽.

20) 1950년에 공포된 교육법 시행령에는 각 교과의 교수요목 및 수업시간을 문교부령으로 정한다던지,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 학교에 대한 교과용 도서는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인정한 것에 한한다는 등의 조항으로 정부의 교육통제를

해방 이후 민족교육 실현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에 부딪힌 이승만 정권의 문교정책의 과제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이승만의 통치이데올로기로 수입된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하는 것과, 국외적으로는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국토와 사상의 분열을 통일하는 것이었다. 사실상 미군정기 이후 개정된 교육체제는 그 내부에 좌·우익의 이데올로기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고, 게다가 미국식 자유 민주주의의 맹목적 도입에 따른 이념 부적응 문제로 진통하고 있었다.²¹⁾ 이에 대해 안호상 제1대 문교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개탄하고 있다.

‘해방 후 비판 없이 요란히 떠드는 민주주의 바람에 우리 민족은 오늘날 이와 같이 불행하고 우리 조국은 이와 같이 파괴되었다.’²²⁾

사실상 남한 사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적 물질 토대를 가진 주체세력도 없었고,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본래 의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초 역시 결여되어 있었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는 이승만 정권의 정당성을 위한 형식적인 정체(政體)로 기능했을 뿐이고, 남북대치 상황에 합당한 반공 이데올로기가 곧 자유민주주의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배층은 이데올로기 갈등상태를 수습하고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적

실시하였다.

21) 한준상, 정미숙, 「1948~53년 문교정책의 이념과 특성」, 『해방전후사의 인식4』, 한길사, 1985, 348쪽.

22) 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한국교육 십년사』, 풍문사, 1959, 44~45쪽, 한준상·정미숙 위의 논문, 349쪽, 재인용.

당한 이념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이승만 정권은 ‘민족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이념을 만들었다.²³⁾ 실제로 이승만은 1948년 9월 국회에서 행한 시정방침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신생자주독립의 민족적 민주주의 국가로 탄생하였다’고 전제하였는데 그에게 있어서 민족적 민주주의 국가란 단일민족 국가로서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적 특권은 허용하지 않으며 만민이 균등한 국가를 지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민주적 민족주의, 즉 일민주의(一民主義)²⁴⁾를 국시로 삼은 이승만 정권은 이를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반대하는 세력을 공산주의 세력으로 겨냥하면서 공산세력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인이나 계급, 종파와 당파를 버리고 서로 함께 뭉쳐야 하며, 이로써 민주주의의 기초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⁵⁾ 이같은 일민주의 사상은 정치뿐 아니라 교육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일민주의의 이론적 틀을 마련했던 초대 문교부장관인 안호상²⁶⁾은 일민주의 사상보급을 최대의 문교정

23) 한준상, 정미숙, 앞의 논문, 348쪽.

24) 이승만은 한국 민족을 ‘일민(一民)’으로 보았고, 시급히 자결, 자급, 자일(自一)하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나뉘어지는데서 죽고 일(一)에서 산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민주의의 내용은 간단하다. ① 우리는 한 민족, 한 핏줄이며 단군 이래 5000년의 긴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이다. 그리고 개인보다는 민족, 국가가 우선이다. ② 일민주의는 자본주의, 공산주의를 모두 거부한다. 일민주의란 남녀 상하차별 없애기, 지방파벌 차별 없애기, 빈부귀천 차별없애기 라는 것이다. 안호상, 『일민주의의 본바탕』, 일민주의 연구원, 1950 ; 연정은, 앞의 논문, 8쪽, 재인용.

25) 김혜수, 「정부수립 직후 이승만 정권의 통치이념 정립과정」, 『이대사원』 28집, 1995, 338쪽.

책으로 삼고, 일민주의를 통해 학원의 사상적 안정과 국민사상을 귀일시켜 반공체제 확립을 목표로 삼았다.²⁷⁾

일민주의 교육은 ‘민족적 민주교육’의 한 형태로 기술되었다. 그 이유로는 국내적으로는 ‘미국식 민주교육’에 대응하면서, 형식면에서는 ‘구미식 개인 자본주의적 민주교육’에 저항하고, 내용면에서는 ‘소련식 공산주의적 교육’에 대결하는 식의 ‘민족적 민주교육’을 통해 신라시대의 민주사상(화백제도)을 계승하여 민족주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이라고 선전되었다.²⁸⁾

일민주의 보급운동은 민족주체성을 주창하면서 민주주의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 민주주의 교육의 원형을 신라 화백제도에서 찾았다. 그러나 화백제도가 귀족층만의 합의형식이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비민주적인 신분적 한계를 갖고 있음을 상기할 때 일민주의의 몰역사성을 알 수 있다. 이런 일민주의에 지식층과 학생들은 비과학적이며 비철학적이라는 조소를 보냈고, 문교정책의 중앙집권적 경향과 교육이념의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강압적인 제시, 학도호국단의 설치 등은 군국주의를 연상시켜 당시 미국식 교육이 몸에 밴 교육계 인사들도 일민주의를 민주교육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

26) 안호상은 나치정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당시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독일에서의 경험은 반자본주의와 반공산주의 입장에서 개인보다는 ‘민족’, ‘국가’를 더 중시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유학에서 돌아온 뒤에는 일제의 사상통제, 황민화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한 해방 이후에도 국내안 문제에 적극적인 찬성활동을 전개하였고, 우익의 반탁운동에도 앞장섰다. 연정은, 앞의 논문, 13쪽.

27) 정미숙, 「한국 문교정책의 교육이념 구성에 관한 분석」, 『분단시대 한국교육』, 교육출판기획실, 푸른나무, 1989, 108쪽.

28) 한준상, 정미숙, 앞의 논문, 349쪽.

되어 호응을 얻어내지 못했다.²⁹⁾ 그러나 초대 문교부장관인 안호상은 이런 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일민주의를 학원의 사상통일정책으로 이용하기 위해 물리적인 통제도 서슴치 않았다.

안호상의 강압적인 교육통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고·대학에 1949년 4월 대통령이 총재, 국무총리가 부총재, 문교부장관이 단장을 맡도록 한 군대식 조직으로 ‘민족의 주의사상 통일’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학도호국단이 조직되었다. 이 조직은 학원 내 좌익세력의 책동을 분쇄하고 민족의식 고취를 통해 애국적 단결을 함양한다는 취지에서 결성되었다. 이러한 취지는 당시 문교부장관이었던 안호상의 학도호국단 결성에 대한 다음의 연설로 확인할 수 있다.

민족의 운명은 이 젊은 학도들이 좌우하게 된다. 이들의 올바른 교육은 일민주의의 그 첫 번째 단계인 제 민족의 통일독립의 사상교육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저들의 힘으로써 학교내의 공산분자들의 파괴행동을 막아내고 (중략) 씩씩하고 협동적이며 조직적인 행동과 기풍을 기르기 위하여 자율적이며 자치적인 학도호국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³⁰⁾ (강조 필자)

위와 같은 목적에 의해 결성된 학도호국단은 전국적으로 좌익교사 색출에 앞장섰고, 1950년대 이승만 동원정치에 주된 대상이 되었다. 더구나 정부는 1949년 9월 대통령령으로 모든 학생활동은 학도호국단의 조직을 통해서만 행해져야 한다고 발표하여 전국 중·고·대학생들의 조직활동을 국가권력이

29) 정미숙, 앞의 책, 113쪽.

30)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문교사』, 중앙대학교 출판국, 1974, 21쪽.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좌익의 주요 거점의 하나였던 학원에 극우 반공세력이 강고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³¹⁾

이러한 학교 내의 감시체계는 교사들에게도 적용되어 중·고 교장·교감에 대한 사상·시사·군사 과목 중심의 교원 재교육이 강화되었다. ‘여·순 사건’을 계기로 교원들의 좌익성향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불온교사 숙청’³²⁾을 단행하여 학원의 사상통일을 꾀하였다.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서 좌익교사와 학생에 대한 탄압이 전국적으로 번져 모든 학교에 학생위원회가 설치되었고, 학교는 좌익운동에 가담한 교사와 학생의 행적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강요당했다. 안호상의 명에 따라 1949년 1월 16일 서울 시내 초·중등 교장은 교사감시자가 되었고, 그 후 연일 ‘불온교사 숙청’에 대한 협의를 가지며, 3월 15일에는 다음과 같은 명분으로 교사에 대한 대파면 숙청을 단행했다.³³⁾

31) 서중석, 「초기 극우반공체제의 형성과 5·30 선거」,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2』, 역사비평사, 1996, 262쪽.

32) 서울시의 경우 1949년 1월 13일자 문교부장관 통첩을 기준으로 2월 말일로 초, 중등학교에 반국가적인 자, 실력이 부족한 자, 당국에 협력하지 않은 자 등에 해당하는 교직원을 다수 숙청하였다. 숙청대상자가 교육자협회나 남로당에 가입하여 반국가적 실천행동을 하던 자에서 더 나아가 실력이 부족하여 교원 추진에 장애가 있는자까지 포괄하여 그 범위조차 애매해지고 모호해지는 형태를 보였다. 연정은, 「감시에서 동원으로, 동원에서 규율로 -1950년대 학도호국단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제 14집, 역사학연구소, 2004, 205쪽.

33) 대대적인 교사 숙청으로 인해 초등교원 3만 5천명, 중등교원 7,900명, 사범교원 3,200명, 전문대학교원 560명, 도합 5만 천명에 전면적인 숙청을 단행하였다. 연정은, 앞의 논문, 27쪽.

의무교육의 실시를 앞두고 국민교육에 충실코자 문교부에서는 남한의 각 대학·중학교·국민학교에 걸쳐서 학원의 민주화를 파괴하는 불순 교직원의 숙청을 각 도·시 당국에 요청했다.³⁴⁾

교육숙청에 따른 사상적 통제는 중등이상의 학교에서 실시된 학생들의 군사훈련과 배속장교제 등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문교부는 1948년 11월 중학생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도호국대를 조직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전국적으로 공고하였고, 이어 중등학교 이상 각 학교에 군사훈련을 정규과목으로 하여 현역장교를 배속할 것을 토론하였다. 이러한 군사훈련의 목적은 북한에 맞서는 군인을 양성하겠다는 것이었으나³⁵⁾ 준비불충분으로 교관이 부족하여 군사훈련에 차질이 발생하자, 1948년 12월 문교부는 국방부와 합의하여 전국 중·고·대학의 체육교사 중에서 군사교관 희망자를 배속 장교요원으로 모집하여 군사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육군사관학교 등에 입소하여 42일간 군사지식과 훈련을 받은 뒤 예비역 소위로 임관되었고, 문교부 발령으로 학교 교련교사로

34) 동아일보, 1949년 3월 17일자.

35) 군사훈련의 목적에 대해서는 당시 문교부장관이 신문시장을 통해 언급한바 있다. “고급 중학교에서는 필수과목으로 하고, 시간당 배정은 일주일에 2시간 내지 4시간정도 할 예정이다. 그 목적에 있어서 민족의 위신을 명시함과 아울러 한걸음 나아가서 세계평화에 적극 동참하려 함이며, 북한 군사력에 대응하기에도 절대 필요한 것이다. 그 이유는 남한의 군사력이 그들보다 우위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도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립신문』, 1948년 11월 13일 ; 연정은, 앞의 논문, 210쪽, 재인용.

각 학교에 배속되었다.³⁶⁾ 또한 문교부는 자원(自願)에 의해 여군 간부를 모집하고 국방부의 후원을 얻어 군사훈련을 실시해 학원을 병영화하여 철저히 통제하였다. 이것은 1948년 말 전쟁의 위협도 아니고 국가비상사태도 아닌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려는 발상으로 모든 학생층을 국가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통제, 통합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³⁷⁾

한마디로 미국식 민주교육을 비판하면서 민족교육을 강조한 것이 일민주의 교육의 외양이었다면, 반공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군정 이후 지속된 미국교육의 영향력내에 있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일민주의 사상을 내세우며 진행되었던 교육정책은 한국전쟁 직전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권력을 장악하게 된 이승만이 미국식 교육을 받은 백낙준을 제2대 문교부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다시 변화했다. 백낙준 취임 직후 발발한 전쟁으로 한국교육은 유엔의 군사원조와 함께 교육원조(미국중심)를 받으면서 교육내용이 상당히 변했고, ‘민주주의 교육’이념이 ‘민족지향적 일민주의’를 대체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일민주의 교육에 비해 민주주의 교육이념에 반공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수용되었고,³⁸⁾ 국가는 교육을 통해 자본주의 이

36) 연정은, 앞의 논문, 210~211쪽.

37) 연정은, 앞의 논문, 32쪽.

안호상은 이 외에도 사회교육차원의 야간강습 개최, 순회강연, 영화상영 등으로 일민주의 지향적 사상교육을 시켰다. 이러한 사상교육은 문교부 장관의 장학방침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내용으로는 첫째, 민주주의 민족교육, 둘째, 국민사상의 귀일, 셋째, 반공정신 함양, 넷째, 일민주의 사상교육, 다섯째 1인 1기 교육 등이 그것이었다. 그 중 1인 1기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장학방침은 모두 문교부 장학행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사상주입정책이라고 일컬을 만한 것이었다. 한준상, 정미숙, 앞의 책, 351쪽.

데올로기와 반공이념을 국민의식으로 내면화하도록 노력하였다.³⁹⁾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 1950년 6월 26일 오전 10시, 문교부의 임시휴교령으로 학교교육이 중단되었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951년 2월 26일 ‘전시학교육특별조치요강’이 발표되기까지 교육은 거의 공백상태였다.

전쟁으로 인하여 1년간 마비되었던 정부의 교육정책은 ‘전시교육체제’라는 중앙집권적인 교육비상조치의 형태로 재개되었는데, 당시 문교행정은 교육에 대한 강한 통제를 통한 반공이데올로기 교육과 국방교육을 내용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백낙준은 “멸공필승의 신념을 배양하고 전국(戰局)과 국제집단안정보장의 인식을 명확히 하여 전시생활을 지도한다”는데 전시교육의 중점을 두어 반공을 지배이념으로 하는 일련의 교육내용과 형식을 문교행정에 도입했다. 이를 통해 안호상 문교장관이 일민주의라는 이름으로 우회적으로 내세웠던 반공이데올로기 교육은 공교롭게도 백낙준의 손에 의해 공식 교육과정으로 채택되었다.⁴⁰⁾

백낙준장관은 먼저 ‘적색교원’ 일소 조치를 취하였다. 수도 서울을 탈환한 후 ‘부역자처벌법’에 의거하여 ‘교원정화선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산주의에 협조하였거나 반정부적인 교사를 뿌리 뽑는다는 명목하에 초·중등교사의 1/4에 달하는 교사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교직에서 쫓아냈다.

또한, 교원들의 정치활동에 국가가 교육공무원법 제정(1953년 4월 18일 법률 제285호로 공포)을 통해 법률적 통제를 가했다. 동법 제27조(정치운동 금

38) 한준상, 정미숙, 앞의 책, 347쪽.

39) 손영원, 「분단의 세계체제론 성격」, 『한국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열음사, 1987, 29쪽 ; 정미숙, 앞의 책, 122~123쪽, 재인용.

40) 한준상, 정미숙, 위의 책, 355쪽.

지)에는 “교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혹은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에는 “정치단체에 적을 둔 교육공무원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단체로부터 탈퇴하지 않는 한 해임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⁴¹⁾ 이와 동시에 장학관과 장학위원제도를 강화시켰는데, 이것 역시 교육의 질적 관리라는 측면과 함께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통제의 측면을 갖고 있었다.

정치활동의 금지는 학생에게도 적용되어 강력한 금지·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총리였던 장택상은 “금번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일반대학·중학교 학생의 정치 혹은 사회운동에의 참가를 일절 불허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고 학생에게 권유 혹은 위협적으로 참가를 종용하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는 담화를 통해 학생의 정치활동 규제를 선언했다. 이처럼 국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교사와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으나 실제로 실시된 교육은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것이었으며, 국가권력이 교육에 개입하여 교사와 학생을 통제하였다.⁴²⁾ 이러한 국가주도의 통

41) 현재까지 교육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 교육공무원법이 전쟁기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서울특별시교육회, 『1955년판 대한교육연감』, 1955, 23~25쪽 ; 김남수, 『1950년대 국민학교·중학교에서의 반공교육』,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11쪽, 재인용.

42) 교사와 학생들에게 일체의 정치활동을 불허하면서 실상 정부는 50년대 내내 학생들을 동원하여 관제테모를 벌였다. 이러한 잦은 학생동원에 대해 대구 「매일신문」에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사설이 실리자 자유당 간부 인술 청년들이 경북 경찰국 사찰과 간부의 지휘 아래 신문사를 습격하여 여러 명의 중·경상자를 내었고, 주필 최석채는 국보법으로 구속되었다. 어용단체와 공권력이 결합하여 정당한 언론의 비판을 물리력으로 제압해 버

제이면에는 다른 사상과 주의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반공이데올로기가 내포되어 있었고 반공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이승만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사상, 단체, 개인을 억압하는 아주 효과적인 무기로 활용되었다.⁴³⁾

이처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강화된 반공교육의 틀은 문교정책과 장학방침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후 1950년대 내내 그 기본골격을 유지하였다.

린 것이었고,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양심적 발언을 하기가 어려웠다.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하), 역사비평사, 1999, 793쪽.

43) 김남수, 앞의 논문, 11쪽.

Ⅲ. 역사교과서 서술과 반공이념

학교에서 전달되는 지식은 교육과정을 통해 선별되는 것으로,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 국가의 검인정과정을 거치지 않은 교과서는 학습교재로 활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과로서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조건하에서 교과서는 특정한 규범과 가치에 대해 긍정 또는 부정의 입장을 취하게 됨으로써 그 사회의 법적·윤리적 가치체계 등을 반영하게 된다.⁴⁴⁾

미군정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도입된 반공이데올로기는 전쟁이 끝난 뒤 교육이념과 문교정책뿐만 아니라 전후(戰後) 제정·공포된 제1차 교육과정의 사회생활과 목표에서도 나타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반공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사회생활과의 목표 5개 항목 중에서 제3항의 사회생활 제 기능에 ‘국방, 도의’라는 기능으로 계승되어 나타나고 있어,⁴⁵⁾ 실제 사회생활과는 반공교육의 대표적인 교과이었으며 그에 대한 예는 역사적 사실과 시사문제로서 해결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⁴⁶⁾

44) 마석한, 앞의 논문, 225~226쪽.

45) 문교부, 『교육과정(1946~1981)』, 54쪽 ; 강창순, 『한국전쟁기(1950~1953) 사회과교육 실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41쪽 재인용.

46) 문교부는 공산주의와 일본에 관련된 국제정세의 추이에 따라 반공방일의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며 「반공·방일교육요항」을 제정·발표하여 각급학교에 시달하였는데, 이 요항의 1장은 ‘반공방일교육요항’ 과 2장 ‘사회생활과 역사교육에 있어서의 방일 반공교육요항’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김남수, 앞의 논문, 25쪽.

이처럼 반공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국가는 교육이념, 문교정책과 같이 직접 교육을 통제한 것 이외에 학생들에게 학습되는 교과내용에까지 통제력을 미쳤다. 특히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교과에서도 지배집단의 입장에 의한 서술이 나타나는데, 특정사실에 있어 은폐·왜곡 등이 그것이다. 당시 분단정권의 한계성을 가지고 세워진 이승만정권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사상전을 통해 지배집단의 정통성을 내세웠고, 이것은 교과내용에 있어 사회주의 세력 축소화, 신탁통치 논쟁에 있어서 좌익세력에 대한 왜곡 등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중등학교 사회생활과 역사교과서의 서술을 살펴보면서 국가의 반공주의 시각이 역사교육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분석대상 교과서는 한국전쟁 직후 제정된 제1차 교육과정기의 것들로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사용된 국정교과서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1차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검정제로 발행된 중등 역사교과서 중에서 중등 1학년 과정에서 사용된 [표1]에 있는 '우리나라 역사'교과서의 한국 근현대사 내용을 분석한다. 다만 여기에서 1차교육과정에 발행된 몇 종의 교과서는 필자가 구하지 못한 관계로 분석대상에서 제외⁴⁷⁾하였다.

[표1] 분석대상 제 1차 교육과정기 「우리나라 역사」교과서 목록

47)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김상기, 『우리나라 역사』, 장왕사, 1956. ; 김용덕, 『새로운 우리나라 역사』, 일한도서, 1957. ; 최영해, 『중등 국사』, 정음사, 1962.

학교/학년 교육과정	중학교
1차 56-62	1
	우리나라 역사
	검정제
교과서 목록	<p>한우근, 『우리나라 역사』, 상문원, 1956</p> <p>조좌호, 『중등국사』, 영지문화사, 1957</p> <p>유홍렬, 『우리나라 역사』, 탐구당, 1960</p> <p>조계찬, 『우리나라 역사』, 백영사, 1956</p> <p>이홍직, 『우리나라 역사』, 민교사, 1956 · 1960</p> <p>최남선, 『국사』, 민중서관, 1962</p> <p>신석호, 『국사』, 동국문화사, 1957</p> <p>이병도, 『중등국사』, 을유문화사, 1956 · 1960</p> <p>역사교육연구회, 『중등 국사』, 정음사, 1960 · 1963</p>

출전: 박진동, 「해방 후 역사교과서 발행제도의 추이」, 『역사교육』 91, 2004, 32쪽을 참고하여 작성함.

1.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 서술과 이념문제

해방 직후 처음으로 발간된 국사교과서는 진단학회의 『國史教本』이었다. 최근세(最近世)편의 집필자는 이병도로서, 그는 「민족의 수난과 반항」이라는

절에서 일제 강점기 ‘민족운동사’를 서술했다.⁴⁸⁾ 이병도는 민족과 반민족, 좌와 우의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던 해방정국에서 ① 3·1 운동, ② 대한민국 임시정부, ③ 의열테러활동, ④ 광주학생운동, ⑤ 신간회 운동 중심의 독립운동사를 구축했다. 이것은 전후(戰後) 발간된 제1차 교육과정기에 검정으로 발간된 여러 교과서에도 그 틀을 답습하여 ① 3·1 운동, ② 대한민국임시정부, ③ 의열테러활동, ④ 6·10만세운동, ⑤ 신간회 운동, ⑥ 광주학생운동 위주의 서술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전선에서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이 강력했고, 특히 192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이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분단과 동족상잔의 동란을 거치면서 이병도나 신석호같은 문헌고증사학자에 의해 구축된 ‘우파·자본주의’ 계열 편향의 민족운동사는 민족운동 서술의 전범(典範)으로 자리잡았다. 전쟁 이후 반공주의에 입각한 분단교육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자주와 통일의 민족적 가치를 추구하는 통일교육으로 방향전환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민족운동사 교육이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던 것이다.⁴⁹⁾ 따라서 당시의 교과서들은 사회주의 운동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진실을 은폐 혹은 호도하는데, 여기서는 반공주의가 투영된 서술로 신간회 운동, 6·10 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분석으로 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신간회의 경우, 해방직후 이병도의 『국사교본』에서는 민족통일전선체로서

48) 민족운동을 ‘자주독립의 운동’ 이 아닌 ‘반항’ 으로 치부한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해방직후 당시 사학자들이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이병도 역시 그 한계를 넘지 못한 서술을 하고 있다.

49) 김정인, 「해방 이후 국사 교과서의 ‘정체성’ 인식」, 『역사교육』85, 2003, 75~76쪽.

의 신간회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합동하여 민족단일전선으로서 신간회의 창립을 보게 되어 삼만여 회원을 가지게 되었다.⁵⁰⁾

그러나 분단정권 수립 이후 1950년에 발간된 『중등사회생활과 우리나라의 생활(역사)』에서는 신간회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다른 교과서도 마찬가지인데, 신간회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거나 언급을 하더라도 신간회의 주도층에 대해서는 민족운동자, 독립운동자, 모든 지식인, 각계인사 등의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처럼 사회주의 운동세력이 신간회에 관여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데,⁵¹⁾ 이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서술에서 볼 수 있다.

나라 안팎에 여러 단체가 조직되어, (중략) 오직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해방에 (중략) 신간회, 근우회 등이 그 중에 들어난 것이며,⁵²⁾

민족운동자를 총 망라한 신간회가 조직되어 광범한 운동이 전개되었다⁵³⁾ (강조 필자)

애국단체로는 (중략) 신간회, 근우회 등이 크게 활약하였고⁵⁴⁾

50) 진단학회, 『국사교본』, 1946, 174쪽.

51) 김정인, 앞의 논문, 90~91쪽.

52) 신석호, 『국사』, 동국문화사, 1957, 172쪽.

53) 이홍직, 『우리나라의 역사』, 민교사, 1960, 170쪽.

탄압이 심하면 심할수록, 독립에 대한 열망도 점점 높아지고 이에 대한 단결도 더욱 굳어졌다. (중략) 이 외에 신간회, 근우회등의 단체가 결성되어, 각각 민족운동을 지도하였다⁵⁵⁾

다만 1960년에 발행된 유홍렬의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예외적으로 ‘사회주의 운동도 매우 활발하여져서 민족주의와 손을 잡고 신간회를 만들어서 일제에 항쟁하였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6·10만세운동과 광주학생운동 역시 사회주의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두 운동을 처음으로 계획하고 주도한 것은 사회주의자들로 사회주의 계열이 1920년대 항일독립운동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고, 실제로 1920년대 중반 이후 각종 신문과 잡지에는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기사가 넘쳐나고 있었다.⁵⁶⁾

6·10 만세운동의 경우, 광주학생운동과 함께 대표적인 항일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6·10 만세운동은 순종의 장례일을 기하여 조선공산당의 ‘6·10 투쟁특별위원회’ 주도하에 모의되었지만, 사전에 발각되어 인쇄한 격문을 압수당하고 투쟁지도부가 와해되는 위기를 맞이하였다. 따라서 당초의 계획은 실현하지 못하고 서울지역에 국한된 소규모투쟁과 지방의 일부지역에서의 산발적인 투쟁으로 귀결되고 말았으나,⁵⁷⁾ 전조선의 각 혁명단체를

54) 조좌호, 『중등국사』, 영지문화사, 1962, 187쪽.

55) 조계찬, 『우리나라 역사』, 백영사, 1956, 241쪽.

56) 이준식, 「한국근대사에서 사회주의계열 민족해방운동의 역사적 실체」, 『내일을 여는 역사』 제24호, 2006, 74쪽.

‘반일 민족혁명 유일전선’으로 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말미암아 각지의 대중단체와 천도교 세력 등 비타협 민족주의 세력을 끌어들이 민족통일전선을 실천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⁵⁸⁾

그러나 6·10 만세운동에 대해 교과서들은 1926년 6월 10일 학생층이 전개한 시위에만 주목할 뿐으로 주도세력을 학생·청년학도·애국학생 등으로 국한하여 묘사하였다. 6·10 만세운동에서 사회주의와의 연관성을 언급한 교과서는 찾아볼 수 없고, ‘민족운동’이나 ‘학생운동’으로 협소하게 이해시키고 있다. 오히려 6·10 만세운동을 3·1운동 이후 수립된 임시정부와 관련하여 애매한 서술을 한 교과서도 보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니, 나라 안의 청년 학도들도 다시금 용기를 얻고, 압박자 일제와 싸울 결심을 굳게 하였다. 이리하여 1926년 순종황제의 장례날을 기하여 다시금 6·10만세 사건이 일어나, 독립 만세의 우렁찬 소리는 삼천리를 진동시켰다.⁵⁹⁾

이와 같은 서술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사회주의가 차지하는 위치를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하려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이는 광주학생운동의 서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광주학생운동의 경우, 이병도는 『국사교본』에서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57) 윤석수, 「조선공산당과 6·10 항일 시위운동」, 『역사비평』1989 봄호, 96~97쪽.

58) 박한용, 「‘공황기’ 국내 민족해방운동의 고양과 민족통일전선운동의 굴절」, 『우리 민족해방운동사』, 역사비평사, 2000, 145~146쪽.

59) 역사교육연구회, 『중등 국사』, 정음사, 1963, 155쪽.

로 확산된 데에는 사회주의 선배들의 지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⁶⁰⁾ 그러나 이 역시 1950년에 발간된 『중등사회생활과 우리나라의 생활(역사)』에서는 ‘전조선 학생의 집단적 시위운동’이라며 사회주의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⁶¹⁾ 다른 대부분의 교과서들 역시 사회주의 운동과의 관련성에 대해 아무런 서술이 없다.

이어 1926년에는 순종이 죽으니, 그 장례날(6.10)에도 대한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1929년(11.3)에는 광주에서 한·일 학생 사이에 충돌 사건이 일어나자 전국의 대·중·소학교가 동맹휴학을 일으키어 일본 정치에 반항하였다.⁶²⁾

1926년 이씨 왕조 최후의 임금인 순종(純宗)의 인산을 기회로 (중략) 6-10 만세운동은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광주학생 사건은 전국적인 학생 운동으로 떨어져, (중략) 일본제국주의의 타도를 부르짖으면서, 씩씩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해마다 청년학도들이 기념하는 학생의 날은 바로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이다.⁶³⁾

그러나 광주학생운동은 단순히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감정적인 충

60) 진단학회, 『국사교본』, 1946, 173~174쪽.

61) 김정인, 앞의 논문, 92쪽.

62) 광주학생운동을 일본정치에 ‘반항’ 한 것으로 표현한 것이 눈에 띈다.

유홍렬, 『우리나라의 역사』, 탐구당, 1963, 140쪽.

63) 조계찬, 『우리나라 역사』, 백영사, 1956, 241쪽.

돌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 또한,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파악했듯이 단순히 사회주의자들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만도 아니었다. 이미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기 전 광주지역에서는 비밀결사 조직인 ‘성진회(醒進會)’가 조선공산당 전남위원회의 지도 아래 동맹휴교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후신인 ‘독서회 중앙본부’와 같은 학생조직이 사회주의 영향아래 학생층들을 항일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⁶⁴⁾ 그럼에도 교과서에는 광주지역에서 전개되었던 사회주의 계열의 학생비밀조직의 활동에 대한 언급 없이 조선인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층들로 말미암아 운동이 전개된 것으로 서술하고 있어 단순한 반일감정의 폭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당시 주장되었던 여러 정치적인 구호에 대한 언급⁶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운동을 통해 학생들이 실현하고자 했던 이념에 대한 설명 없이 ‘민족독립’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국한시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만주지역에서 1920년·1930년대에 활발하게 일어난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의 항일 운동과 중국과 연계된 항일투쟁의 사실 역시 ‘사회주의’에 대한 언급 없이 ‘우리 동포’란 단어를 사용해 모호하게 서술⁶⁶⁾하고 있다. 이에 반

64) 광주에서 일어난 시위가 전국적 규모의 민족해방운동으로 빠르게 퍼져나간 데는 각 지역의 사회주의 조직과 긴밀한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간회, 근우회, 조선학생전위동맹, 조선청년총동맹 등 사회주의 세력의 지원을 받아 학원운동이 정치운동 즉 독립운동 민족해방운동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65) 광주학생 운동과정에서 제창된 구호들을 살펴보면 “일본제국주의 타도”, “피억압 민족해방 만세”, “사회과학 연구의 자유를 획득하자” 등 정치투쟁 구호와 사회주의를 선전·옹호하는 내용이 등장했다.

66) 역사교육연구회, 『중등 국사』, 정음사, 1963, 157쪽.

해 이승만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서술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방 이후 남한의 정권과 지배층들이 저항적·민족적 분과인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활용하여 친일전력이 있는 자신들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임정법통론(臨政法統論)’을 주장한 것⁶⁷⁾과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다. 물론 3.1운동으로 수립된 직후 민족의 독립운동을 총괄하는 대표적 기관이었으나 1923년 ‘국민대표자회의’ 이후부터는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는 상관없이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었고, 이는 당시의 지배집단의 정통성에 의한 서술이라 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조직하고 한국의 독립을 세계에 선포하였으며, 이와 전후하여 나라 안팎에 여러 단체가 조직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오직 광복과 민족의 해방에 노력하였는데⁶⁸⁾

이승만 박사는 미국 지원하에 활발히 활동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광복군을 조직하여, 대일 선전을 성명하여, 연합군 측에 가담하였다.⁶⁹⁾

이승만, 안창호, 김구 등의 지도자들은 그 해 4월에 중국 상해에 모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세워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삼았다. 이에 국내외의 애국자들은 크게 힘을 얻어 이후 여러 가지 애국단체를 만들어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꾸준히 싸웠다.⁷⁰⁾

67) 김정인, 앞의 논문, 83쪽.

68) 신석호, 『국사』, 동국문화사, 1957, 172쪽.

69) 한우근, 『우리나라 역사』, 1956, 199쪽.

당시 교과서에서 나타난 임시정부의 서술에서 일제에 대항하여 싸운 대표적인 민족운동가로 ‘이승만’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외교론 등의 독립운동을 통해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았고,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승만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사건이 1919년 3·1운동 발발과 거의 동시에 미주지역에서 논란이 야기되었던 국제연맹하의 위임통치 청원이었다. 이 청원은 한국인의 자력에 의한 독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차선의 해결책으로 미국주도의 국제연맹을 통한 식민통치를 상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병준은 이승만이 위임통치에 대한 정치적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독립 부정의 방안인 위임통치 청원을 스스로 작성, 제출하여 독립운동의 대표자라는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망각했고, 재미 한인의 독립 의지를 부정했다고 본다.⁷¹⁾ 또한 외교론을 내세워 워싱턴에 구미위원부를 설립함으로써 대미교섭을 벌였으나 크게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미주한인사회에서 이승만의 입지가 약해진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⁷²⁾

70) 조좌호, 『중등국사』, 영지문화사, 1962, 187쪽.

71) 이승만은 위임통치안이 논란이 되자 “국제연맹회에 위임하자 한 것이 그때 세계형편에 적당히 될 줄로 생각하고 서명한 것”으로 변명한다. 그 외 이승만에 대한 연구로 정병준의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05를 참고.

72) 고정휴,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했는가」, 『역사비평』, 1991 겨울호, 198~204쪽.

이 것 외에 흥미로운 것은 이승만에 대한 호칭인데, 당시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언급된 역사인물들은 특별한 호칭이나 경칭이 없이 서술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승만에 대

이처럼 해방 이후 독립운동사 교육은 반공주의가 철저히 투영되고 관철되는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반공주의 시각으로 인해 제외하다보니 한국의 독립운동사는 축소, 과편화되는 결과를 불러 일으켰고, 나아가 이승만의 역할이 과도하게 부각되었다. 이는 역사교과서 서술이 당시 최고 지도자의 업적을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해방 직후 신탁통치 문제

해방 직후사 서술에 있어 당시 교과서는 카이로·포츠담선언의 내용과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미, 영, 중 3국은 1943년 11월에 카이로 회의를 열어 전후의 여러 가지 문제와 일본에 대한 정책 등을 토의 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미, 영, 중 3국은 장차 한국을 독립국가로서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또 1945년 7월에 열린 미, 영, 소 3국의 포스담(Potsdam)회의에서도 한국의 독립을 다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독립은 일본의 패망 이전에, 이미 국제적으로 결정되어, 전쟁의 종말과 더불어, 완전한 승인을 받게끔 되어있었다.⁷³⁾

해서는 '박사' 라는 호칭이 붙어져있었고, 이것은 4월 혁명 이후 발간된 교과서에는 사라지게 되었다.

73) 조계찬, 『우리나라 역사』, 백영사, 1956, 244쪽.

1943년에 미, 영, 중 세 나라는 카이로에서 회담하여 일본이 항복하면 아시아의 모든 상태는 80년 전으로 돌아가게 하고, 한국을 독립시키겠다는 굳은 선언을 한 바 있었고, 1945년 7월에는 포츠담에서 이것을 거듭 확인하여, 일본에게 항복을 권고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해방을 더욱 굳게 약속하였던 것이다.⁷⁴⁾

카이로 회담과 포츠담 선언에서 연합국 여러 나라가 한국의 독립을 원조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한만큼, 우리는 해방과 동시에 곧 독립국가가 되어 자유로운 생활을 할 줄 알았다.⁷⁵⁾

앞서 1943년의 카이로 선언에서 미국, 영국, 중국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결의하였고, 1945년의 포츠담 선언에서 이것이 재확인되었으므로 우리는 독립이 곧 닥쳐올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⁷⁶⁾

이처럼 우리 민족은 두 회담을 통해 완전한 자주독립이 올 것을 기대하였고, 독립을 통한 ‘자유로운 생활’을 기대하며 해방을 맞이한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물론, 1943년 말 발표된 카이로 선언은 “조선인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과정을 거쳐(in due course) 조선을 자유독립 시킬 것을 결의한다”고 밝히면서 조선의 독립을 공식천명하였다. 하지만 이는 교과서 서술에서 보는 것처럼 ‘즉시독립’이 아닌 ‘적절한 과정(in due course)’을 거친

74) 역사교육연구회, 『중등 국사』, 정음사, 1963, 158쪽.

75) 신석호, 『국사』, 동국문화사, 1957, 176쪽.

76) 이홍직, 『우리나라 역사』, 민교사, 1960, 173쪽.

‘유보독립’ 즉 신탁통치 기간 동안 독립을 유보할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대해 교과서는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단순히 연합국들이 독립을 보장해준 것으로만 설명하고 있다.⁷⁷⁾ 또한, 이러한 서술에서 아쉬운 점은 연합국들의 조선독립 약속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언급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제가 전쟁에 패하는 그 순간까지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온 세력에(사회주의 세력이든, 민족주의 세력이든) 대한 언급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은 자칫 우리 민족의 독립이 외부 세력에 의해 얻어진 것으로만 보여 질 수 있다.

곧이어 교과서에서는 한반도에 미군과 소련군 주둔을 서술하면서 ‘갑작스럽게’ 신탁통치가 실시된 것으로 서술 하고 있는데, 이 서술로만 본다면 카이로, 포츠담 회담을 통해 독립을 약속받았으나 ‘느닷없이 나온’ 신탁통치와 이를 ‘지지하는 공산주의자’들로 인해 독립이 어려워졌던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런 서술은 신탁통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소련과 사회주의자들을 독립에 방해되는 세력으로 부각시켜 서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38선이 생기고 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진 채 미국과 소련은 각기 점령한 지역에 군정(軍政)을 실시하였다. 온 겨레는 민주주의 원칙

77)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카이로 선언의 “적절한 과정을 거쳐” 라는 표현에 대해 이 선언의 발표 당시부터 의구심을 피력하였다. 중경에 있던 김구는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적절한 과정을 거쳐” 라는 구절을 해명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연합국의 정책이 조선에 대한 외부지배를 획책하는 모욕적이며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원석, 「신탁통치안의 기원과 왜곡」, 『내일을 여는 역사』 제23호, 2006, 362쪽.

위에 선 통일된 완전한 독립국을 세우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소련의 힘을 빌려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은 신탁통치(信託統治)를 지지하며 이를 방해하였다. 임시정부 수립을 위하여 열린 미소 동공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는 그 때문에 깨어지고 독립의 길에 커다란 암영이 던져지었다.⁷⁸⁾

제이차 대전이 끝나자 전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 영, 소 3국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이 모스크바회의는 한국문제에 관하여 이미 국제적으로 독립이 결정된 것을 돌보지 않고 일정 기간동안 신탁통치를 실시하여 그 이후에 우리나라를 독립국가로서 승인할 것을 결의하였다.⁷⁹⁾ (강조 필자)

위와 같은 서술⁸⁰⁾은 마치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국들이 조선에 대한 독립을 약속한 카이로, 포츠담선언과 완전히 배치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3상회의에서 나온 신탁통치안은 카이로·포츠담 선언에서의 독립에 대한 약속을 어긴 것이라 볼 수 없

78) 이홍직, 『우리나라 역사』, 민교사, 1956, 171쪽.

79) 조계찬, 『우리나라 역사』, 백영사, 1956, 244~245쪽.

80)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아무런 설명없이 미·소의 주둔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 유홍렬의 「우리나라 역사」(탐구당, 1963)은 “소련군은 쉽게 북한을 차지하고, 미군은 한 달 늦게 인천으로 들어와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켰으나 이후 이 양국 군대는 그 정치적 주장의 대립으로 38선을 경계로 삼고 각각 군정을 베푸는 한편 그 주의를 따르는 정권을 세우려 하였다” (142쪽)라고 서술하여 미국과 소련의 정치적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다. 이것은 신탁통치를 독립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는 우익세력의 입장을 교과서 서술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사실과는 다른 부정확한 서술이라 하겠다.

또한 당시의 교과서들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제1항으로 조속히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조선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사항이다. 삼상회의를 지지했던 좌익도 이 부분을 가장 중시했고, 신탁통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여운형 등 중도좌파와 김규식, 김병로 등 중도우파도 이 때문에 미소공위에 적극 협조했다. 그러나 교과서는 이러한 언급없이 모스크바 결정 지지가 곧 독립과 대립되는 것으로 단순화하고 있다. 당시의 국제관계를 볼 때 현실적으로 미소공위가 성공해야만 민족국가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로지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있게 될 신탁통치에만 관심을 기울여 반대를 하면 통일민족국가 건설은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오히려 3상회의 결정은 비록 즉각적인 독립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연합국 사이에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조선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통일된 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만들어졌음을 의미⁸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교과서 서술에서는 삼상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설명이나 결정내용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서술 없이, 다만 삼상회의가 우리 민족의 기대를 저버린 강대국의 결정이었다고 단순화시켜 평가하고 있다.

3상회의의 결정이 전달되자 국내 정치 세력은 모스크바 결정 지지진영과

81) 강만길 외, 「우리 민족해방운동사」, 역사비평사, 2000, 297쪽.

반탁진영으로 양분되어 극렬히 대립하였는데, 교과서에서는 모스크바 결정 지지진영과 반탁진영의 입장차이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 없이 반탁(=우익)의 입장에서 모스크바 결정 지지운동을 하는 좌익과 그 배후세력으로 소련을 지목하면서 이들을 민족의 독립국가 건설에 방해가 되는 주체들로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인 서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미·소 양국은 1946년 3월에 공동 위원회를 열고 남북문제를 상의하였으나, 이것도 소련의 고집으로 실패하였다⁸²⁾

여기서 미·소 공위에서 어떠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는지와 여기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입장은 각각 어떠한지에 대한 서술은 없다. 다만 소련의 ‘고집으로 실패하였다’라고 서술하여 일방적이고, 감정적인 서술로 학생들에게 무의식적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해방직후 모스크바 3상결정을 둘러싼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의 내용은 무엇이고,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논란의 핵심이 된 ‘신탁통치안’이 미국이 구상하고 제안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교과서는 해방 직후의 우익 정치세력과 언론이 호도했던 것처럼 신탁통치안은 소련이 제안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반탁’ 논리를 명분으로 좌익세력을 반민족세력으로 매도하였던 것이다.⁸³⁾

82) 유흥렬, 『우리나라의 역사』, 탐구당, 1963, 146쪽.

83) 김영교, 『신탁통치 문제에 대한 중등교육과정 교과서 서술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20쪽.

또한 미소공위의 결렬 이후 분단의 위기를 느낀 당시 정치인들은 극우세력을 제외하고 통일민족국가 수립을 위해 ‘좌우합작운동’과 남북지도자회의를 추진하였으나, 여기에 대한 언급은 어느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분단정권을 막기 위해 우리 민족이 이러한 노력을 전개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당시 모든 교과서가 이러한 서술로 일관한 것은 단정수립을 주장한 이승만, 한민당 등 남한 지배집단의 극단적인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세워진 분단정권의 한계성에 있다고 보여진다. 극단적 반공이데올로기 위에 세워진 정부하에서 남북협상운동이나 좌우합작운동과 같은 것을 서술하는 것은 용납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3. 분단정권의 수립과정 서술

1946년 5월에 1차 미소공위가 결렬되고 1947년 5월에 개최된 2차 미소공위 역시 1차와 마찬가지로 임시정부 구성을 위한 협의대상 선정을 둘러싼 대립으로 휴회되자 미국은 1947년 9월 소련에게 한국문제를 유엔에 넘기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을 회피하고자 유엔을 이용하려 한 것으로 서중석은 미국이 유엔으로 한국문제를 넘긴다는 것은 곧 한반도의 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미군측에 의한 한국문제의 유엔 토의는 미국의 대한정책을 유엔의 이름을 빌어 수행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었고, 이것에 대해 소련이 거부할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따라서 한국 전역에 걸쳐 유엔의 감시 아래 총선거가 실시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명백히 불가능하였다.⁸⁴⁾

이처럼 한국문제의 유엔이관 자체가 미국이 소련과의 타협을 포기하고 취한 일방적인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분단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소련과 좌익에게만 전가하고 있다.

북한의 쏘련군은 그의 괴뢰인 김일성 도배를 내세워 공산주의 체제를 갖추고, 남한의 미군은 자유 민주국가를 세우려 하니, 38선은 점점 굳어만 갔다. 이와 같이 남북으로 갈려 있다는 것은 우리 겨레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으니, 남한의 애국지사들은 유엔의 감시 아래 남북을 통한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하루바삐 통일 국가를 세울 것을 추진하였으나 쏘련과 북한의 반대로 실패하였다.⁸⁵⁾ (강조 필자)

남쪽의 민주 진영은 미국을 비롯한 유·엔(U.N) 여러 나라의 협조를 얻어 남북을 통한 총선거를 실시하고 하루 빨리 조국을 통일을 완수하려 하였으나,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⁸⁶⁾ (강조 필자)

당시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던 유엔은 1947년 11월 14일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한총선거 실시를 결정하였고, 선거 감시를 위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 유엔한위)을 만들었다. 1948년 1월 8일 유엔한위가 남한에 들어왔으나 소련과 북한은 38선 이북지역에 입국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에 유

84)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1, 521쪽.

85) 조좌호, 『중등 국사』, 영지문화사, 1962, 190~191쪽.

86) 신석호, 『국사』, 동국문화사, 1957, 176~177쪽.

엔 소총회는 2월 26일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한다고 결정하였다.⁸⁷⁾ 당시의 교과서들은 소련과 북한의 유엔한위 입국거부를 통일국가 수립 좌절에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완전 독립과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민족의 소원은 날이갈수록 높아지니, 미국은 이 문제를 UN총회에 상정하였다. 소련은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통일과 독립을 방해하기 위하여 별별 공작을 다하였으나, 총회의 결과는 UN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도록 결의되었다. 결의에 따라 (중략) 공산도배들은 자기네들이 민중의 신망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이것이 두려워 38선 이북 지구의 선거를 반대하였으므로 (중략) 독립운동의 최고투사인 이승만 박사를 추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해 12월 UN총회에서 국제적 승인을 얻어 당당한 독립국가로서 국제 무대 위에 나서게 되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이승만 박사의 지도 밑에 전후(前後) 약 40만에 민족적 독립국가를 다시 건설하였는데 (중략) 3·1정신을 기초로 한 민주국가이며 각자의 맡은바 책임과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행복이 약속된 살기 좋은 나라이다.⁸⁸⁾ (강조 필자)

미국은 우리의 독립을 실현하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소련과 미소공동 위원회를 가졌으나, 딴 생각을 품은 소련은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⁸⁹⁾ (강조 필자)

87) 역사학 연구소, 『강좌 한국근현대사』, 풀빛, 2002, 261~262쪽.

88) 조계찬, 『우리나라 역사』, 백영사, 1956, 245~246쪽.

미국의 영향력이 컸던 유엔을 통한 선거는 그 자체가 미국이 의도한 분단 정권 수립과 연결되는 것임에도 통일정부 수립 실패를 일방적으로 소련과 좌익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처럼 분단으로 가는 과정을 협소화시켜 서술하며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배제하여 분단정권 수립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는 식으로 당시 지배층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여 서술하고 있다.

당시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실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좌파정당인 남조선노동당과 중도파 정당인 근로인민당, 청우당, 민족자주연맹 등과 우파인 김구의 한국독립당 등 거의 모든 정치세력은 민족을 분열시키는 단독선거를 완강히 반대하였다. 오직 이전부터 ‘정읍발언’을 비롯해 남한단정수립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던 이승만과 한민당 극우세력만이 단독선거에 찬성하였다.

단선단정반대투쟁은 남로당과 전평을 중심으로 ‘2·7 투쟁’을 통하여 학생, 노동자, 농민세력으로 이어지는 조직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었고, 제주에서는 ‘4·3 사건’을 통해 5·10 단독선거를 무산시켰다. 한편 단정에 반대하는 여러 정치세력은 남북연석회의에 모여 미국과 소련에게 군대철수를 요청하고, 선거를 치른다해도 인정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였다.⁸⁹⁾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언급없이 ‘전 민중의 염원’에 따라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넘겨 선거가 치뤄진 것으로 다루고 있다.

통일과 독립을 바라는 민족의 열망은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협력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드디어 민족의 의사는 유·엔에

89) 역사교육연구회, 『중등 국사』, 정음사, 1963, 159쪽.

90) 역사학 연구소, 앞의 책, 264쪽.

반영되어서 (중략) 8월 15일 대한민국의 성립을 국내외에 선포하니, 오랫동안
안의 독립의 염원이 성취된 것이며, 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이
룩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유·엔 및 미국을 비롯한 우방 여러 나라들의 승
인을 얻어 국제적인 지위가 확고하여졌다.⁹¹⁾ (강조 필자)

우리의 자유독립의 갈망은 유·엔 총회에 반영되어, (중략) 유·엔
소총회에서 우리의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중
략) 8월 15일에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보게 되었다. 우리는 자유
독립의 종소리는 이제 높이 울려졌다. 한국독립의 국제 승인도 우리 대표
의 정당한 주장에 의하여 동년 12월 12일에 달성되고 말았다.⁹²⁾ (강조 필
자)

독립을 갈망하던 한민족은 우리 손으로 독립을 이루고자, 국민의 여
론을 유엔총회에 반영시키니,⁹³⁾ (강조 필자)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여기에서 말하는 ‘통일과 독립을 바라는 민족’은 우
익세력만을 말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세력들은 모두 ‘반민족세력’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교과서는 모든 민중의 염원에 따라 선거가 치러진 것으
로 서술하여 사실자체의 은폐를 통해 정부의 정통성을 내세우고 있다.

극우세력을 제외한 모든 민중과 정당이 반대한 가운데 치루어진 5·10 단

91) 이홍직, 『우리나라 역사』, 민교사, 1960, 173~174쪽.

92) 이병도, 『중등 국사』, 을유문화사, 1956, 186쪽.

93) 역사교육 연구회, 『중등 국사』, 정음사, 1963, 159쪽.

독선거로 제헌국회가 만들어지고,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뽑아 반쪽짜리 정부를 만들었으나 전체 우익조차 포괄하지 못해 정통성을 갖는데 어려움이 많았다.⁹⁴⁾ 국가의 정통성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거의 모든 교과서는 ‘유엔의 승인’을 앞세우며 국제사회에 독립국가로 승인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4. 한국전쟁과 북진통일론

이제까지 한국전쟁⁹⁵⁾에 대한 연구는 발발원인을 묻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94)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 문제는 두 가지 시선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이승만 정부가 우리 민족의 염원이었던 통일 민족 국가수립에 반하는 것으로 이승만 정권의 정당성을 상실시키는 한계성을 가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5·10 총선거라는 합법적인 방법과 유엔 총회의 승인을 거쳤으므로 정통성을 인정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에 대한 정통성은 철자상의 합법성은 인정하되, 그 한계성을 가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따라서 정당성의 한계를 가진 이승만 정부는 정치권력을 장악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공·반일 이데올로기, 자유 민주주의, 북진통일론과 같은 이념들을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최명경, 『김인정하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분석』, 2004, 울산대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석사학위 논문, 5쪽.

95) 1950 ~ 1953년 사시에 한반도 (또는 조선반도)에서 벌어진 남북간 전쟁을 지칭하는 용어로 흔히 ‘6·25’, ‘한국전쟁’, ‘조선전쟁’ 등이 사용된다. 남측에서는 1980년대 이후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6·25’ 라는 용어가 이 전쟁의 기원을 1950년 6월 25일의 무력 충돌로 단순화시키고, 전쟁에 대한 논의를 전쟁책임론으로 환원시킨다는 이유에서 ‘한국전

이는 전쟁의 책임을 질 대상을 향해 전후(戰後)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전쟁 전체의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노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교과서는 전쟁을 ‘부동항을 얻기 위한 야욕에 찬’ 소련의 지시로 말미암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쟁 발발까지의 남북한에 걸친 정국상황에 대한 설명없이 ‘평화롭던’ 남한이 북측의 공격을 받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 ‘북의 갑작스런 침략’으로 인해 시작된 전쟁은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에 밀려 후퇴한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북한의 ‘침략 전쟁’에 대한 유엔의 즉각적인 참전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공산군의 불법적인 침략은 세계 모든 자유 국가들의 분노를 사서 곧 유·엔군의 원조를 얻게 되었다.⁹⁶⁾ (강조 필자)

국제평화를 위한 세계의 기구인 유엔에서는 집단 안정 보장의 견지에서, 침략자 공산군을 격멸하고자 출병을 결의하니, 미국을 위시하여 영국, 프랑스 등 큰 나라는 물론, 이디오피아, 컬럼비아 같은 작은 나라에 이르기까지 유엔군으로 참전하게 되었다.⁹⁷⁾ (강조 필자)

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기한 이후 대체로 통용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도 완전히 객관적 용어는 아니지만 ‘한국전쟁’을 사용하여 서술할 것이다. 이신철, 「6·25 남북전쟁 시기 이북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 『역사와 현실』 제 54권, 2004, 131~132쪽.

96) 이흥직, 『우리나라 역사』, 민교사, 1956, 172쪽.

97) 역사교육 연구회, 『중등 국사』, 정음사, 1963, 162쪽.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북한을 침공자로 낙인찍고 38선 이북으로 인민군의 철거를 요구하는 한편 남한에 대한 군사적 원조를 승인하는 유엔의 승인을 이끌어냈다. 교과서는 미국주도의 유엔 참전을 ‘국제평화’와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제적인 성격의 전쟁으로 풀어내고 있다. 그러나 당시 한국전쟁의 발발을 소련의 위협으로 간주한 미국의 대응에 대해 일부 나라들은 전쟁의 성격을 내전으로 간주하여 간접하는 것을 꺼려했다.⁹⁸⁾ 그러나 교과 내용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 국가’들이 ‘불법침략’에 분노하여 즉흥적으로 참전한 것과 같이 되어 있다.

또한 남한을 점령한 북한의 점령정책에 대해 서술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노골적으로 북한을 비난하고, 점령시기 민중들의 고통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나 남한을 비롯한 유엔군의 실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하지 않고 있다.

평화스런 우리 땅에 침략을 개시하여 국토를 전쟁터로 만들어, 가는 곳마다 살인, 방화를 일삼아 수라장을 이루었다.⁹⁹⁾

서울에 들어온 공산군은 국군의 후퇴를 따라 자꾸 남하하면서 도시와 농촌을 점령하고, 좌익분자들은 이제는 제세상을 만났다 하고, 괴뢰군과 함께, 애국인사를 반동분자라 하여 납치 혹은 학살하고, 그 가산(家産)을 몰수하여, 청년남녀들을 강제로 뽑아 의용군이라 하여 맨주먹으로 전선에 내보내고, 기타 인민을 노예와 같이 강제로 부역을 시키는 등, 갖은 압박과 잔악한 짓은 다

98) 정해구, 앞의 논문, 44쪽.

99) 역사교육 연구회, 앞의 책, 162쪽.

하였다.¹⁰⁰⁾

이것은 전쟁 당시 발생한 민간인 학살¹⁰¹⁾에 대한 서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민간인 학살은 이미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4·3사건, 여순사건과 같은 국지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전국적 범위로 확대되었던 것이다.¹⁰²⁾ 한국전쟁 발발 후 희생자의 수와 그 범위가 확대된 학살은 인민군과 국군 및 미군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당사자 모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으나 교과서에서는 인민군에 의한 우익인사 학살만이 알려졌다. 그 이유로는 국군의 명예실추에 대한 우려, 혈맹 미국에 대한 믿음과 배려등과 같은 편협한 이데올로기, 수많은 민간인학살이 빛나는 투쟁의 전과로 둔갑해 왔다는 것으로 들 수 있겠다. 물론, 당시의 교과서에서 우익세력에 의한 학살에 대한 교과서 서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적어

100) 이병도, 『중등 국사』, 을유문화사, 1956, 186~187쪽.

101) 4월 혁명 뒤 국회에서 이승만정권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을 조사했을 때, 국회의원들은 억울한 학살의 피해자를 ‘양민’이라 규정했다. 양민이 선량한 국민이라면, 그 반대쪽에는 ‘비양민 = 불순분자’가 존재한다. 양민이라는 용어는 좌익 이데올로기에 감염되지 않은 선량한 국민은 보호받아야하지만, 양민을 벗어난 통비분자, 좌익분자는 보호받을 수 없으며 죽여도 좋다는 지배층의 논리를 은연중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 할지라도 그 신병에 대한 처분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하며, 군인이나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민간인 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김득중,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 『내일을 여는 역사』, 제18호, 2004, 51~52쪽.

102) 김득중, 위의 논문, 42쪽.

도 학살을 통한 전쟁의 비극을 통해 평화교육을 실현했어야함에도 교과내용에서는 좌익의 학살만을 언급하고 있다. ‘보도연맹’과 같은 우익세력과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학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은폐하면서 좌익세력의 학살을 부각시켜 좌익에 대한 ‘적’의 개념을 학생들에게 심어주었다. 이것은 좌익세력에 대한 증오와 적대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으로¹⁰³⁾ 당시 우익세력의 정치적인 의도에 입각한 서술이라 볼 수 있겠다.

전쟁의 양상은 중공군의 개입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38선 부근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여 어느 일방도 결정적인 승세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51년 6월 23일 소련의 유엔대표 말리크가 휴전제안을 하자 같은 달 30일 유엔군 사령관 리지웨이 장군도 휴전회담의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리지웨이의 제안에 북한, 중공이 동의함으로써 휴전회담이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개최되었다.¹⁰⁴⁾

휴전교섭은 의제선택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였으나 1951년 7월 26일 5항목의 의사일정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의제를 합의하는데 또다시 2년여의 시간이 걸렸고, 군사적 승리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

103) 김득중, 앞의 논문, 51쪽.

104) 휴전협상이 시작된 배경은 양측이 전선에서 고지쟁탈전을 계속했지만, 어느 쪽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과 소련 지도자들은 전쟁이 자신들의 직접 대결이나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미국정부는 전쟁의 확대를 주장했던 유엔사령관 맥아더를 1951년 4월 해임함으로써, 한국의 통일을 위해 전쟁에 호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조성훈, 「왜 이승만은 휴전협정에 반대했을까?」, 『내일을 여는 역사』 제21호, 2005, 158쪽.

구하고 전쟁은 그 기간만큼 연장되어 오히려 전쟁의 피해는 더욱 증대하였다.

그러나 남한정부는 휴전회담을 반대했고, 이것은 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휴전회담 자체를 통일을 가로막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으로 진격하여 통일을 완수하여야 한다는 이승만의 북진통일을 전 민중의 주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휴전회담에서 다뤄진 주요 의제에 대한 제시 없이 휴전협정 자체를 반통일적 요소로 바라보고 있으며 휴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다고만 서술되어 있다.

단 휴전협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포로송환문제는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는 포로송환 문제가 남북한 정권의 체제 대결과 연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은 1951년 중반에 들어 사실상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군사적 승리를 얻기 어려워지고 약간의 전진에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휴전협정과 더불어 군사적 승리에 대신할 수 있는 정치적, 심리적 승리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공산포로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스스로’ 선택하는 ‘인도주의’적 자원 송환 원칙으로 나타났던 것이다.¹⁰⁵⁾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포로송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리측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공산측에 송환되기를 싫어하는 포로들을 그들의 의사에 따라 석방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공산측은 한사고, 이에 반대하였다. (중략) 이승만 대통령은 적군의 비인도적 주장에 격분하여 전쟁의 위협을 무릅쓰고, 반공포로를 석방하였다.(1953년 6월) 이 결단

105) 정해구, 앞의 논문, 103쪽.

성있는 행동은 우리민족의 의사를 전세계에 선언한 것이니, (중략) 반공포로의 석방으로 휴전회담은 중대한 위기를 봉착하여 재차 전쟁을 발생할 듯기세를 보였다. (중략) 이미 공산군은 그 힘이 약하여 전쟁을 계속 할 여유가 없었으므로 우리측의 정당한 행동에 굴복하여, 마침내 휴전조약이 체결되었다.(1953년 7월)¹⁰⁶⁾ (강조 필자)

특히 포로교환의 문제로 적은 포로의 의사를 묻지 말고 강제로 교환하자 하고, 아방은 그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교환하자고 하여, 결국 이로써 회담이 결렬되더니(기서1952, 10, 8일), 그 후에 또 다시 재개되어 유·엔측은 아방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산측과 현 전선을 정전선으로 하여, 드디어 4286년(서기 1953년)7월 27일에 휴전조약을 성립시키고 말았다.¹⁰⁷⁾ (밑줄은 원문 그대로)

위의 서술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한 포로교환 문제를 넘어 이념 문제로 부각된다. 포로는 전쟁이 끝난 후 모두 자국으로 보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으나, 두 진영 모두는 전투 대신에 포로교환 문제를 통해 자기진영의 체면과 이데올로기의 우위를 확보하려고 했다.¹⁰⁸⁾

당시 포로교환을 둘러싸고 1년 6개월이나 대립한 뒤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이승만은 1953년 6월 18일 일방적으로 포로를 석방하여 막바지에 있던 협정을 한달이나 늦추는 무모한 행동을 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한 국가의

106) 조계찬, 『우리나라 역사』, 백영사, 1956, 249~250쪽.

107) 이병도, 『중등 국사』, 을유문화사, 1956, 189쪽.

108) 조성훈, 앞의 논문, 160쪽.

원수의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옹호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당시 교과서들은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 이승만정권의 휴전반대 정책을 노골적으로 옹호·강조하였고 더구나 이병도의 교과서는 휴전반대 내용을 밑줄을 그어 강조함으로써, 특정 주제로써 강조하는 주입식 교육의 폐단을 잘 보여주고 있다.¹⁰⁹⁾

이승만정권의 휴전반대는 그의 ‘북진통일론’과 연결되는 것으로, 그의 주장을 남한의 민중들의 염원처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당시 전개되었던 휴전반대태도는 관제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 많으며, 전쟁에 지친 민중들이 과연 그의 ‘북진통일론’에 동조했을까 하는 문제가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교과서 서술내용이다.

휴전교섭은 국토의 완전한 통일을 주장하여, 휴전을 반대하는 민족의 소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¹¹⁰⁾

통일을 눈앞에 둔 채 휴전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비통한 일이었으나¹¹¹⁾

1953년 7월에 맺어진 휴전조약으로 인하여 침략은 일시적인 종결을 보았다. 그러나 침략의 진정한 종결을 가져오기 위하여 온 국민은 북진통일을 웨치고 있다.¹¹²⁾

109) 이신철, 앞의 논문, 187쪽.

110) 역사교육 연구회, 『중등 국사』, 정음사, 1963, 163쪽.

111) 조계찬, 『우리나라 역사』, 백영사, 1956, 250쪽.

휴전협정의 성립으로 보아, 민족 통일의 속망은 이루지 못한 채 더욱 더 큰 시련으로 민족앞에¹¹³⁾

우리나라는 휴전회담을 결사반대하고 북진통일을 극력 주장하였으나¹¹⁴⁾

이승만 정부는 아예 교과서에 북진통일을 언급하고 있는데, 휴전으로 인해 영구히 분단되는 것도 문제가 있으나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 무력을 위한 통일을 교과서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서술은 당시의 정국상황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도 했다. 전쟁을 거치면서 좌익을 무력화시키고, 휴전을 주장하는 자는 통일 반대자로 몰아 어떠한 휴전 제의나 평화운동에도 침묵하게끔 몰아갔던 것이다.¹¹⁵⁾

그러나 실지 이승만 정부가 주장한 북진통일은 비현실적인 통일론이었다. 또한 이승만이 북의 남침을 언급한 것 역시 ‘국내용’으로, 참혹한 피해를 남긴 전쟁이 끝난 직후여서 재발 가능성을 거의 믿지 않았고, 또 재발이 된다면 그것은 한국전쟁이 보여준 것처럼 국제전일 수밖에 없다고 대개가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진통일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은 이

112) 이흥직, 『우리나라 역사』, 민교사, 1956, 172쪽.

113) 한우근, 『우리나라 역사』, 1956, 201쪽.

114) 신석호, 『국사』, 동국문화사, 1957, 178쪽.

115) 서중석, 「이승만과 북진통일 -1950년대 극우반공독재의 해부-」, 『역사비평』 1995 여름호, 1995, 118~119쪽.

전부터 미국에 요구해온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내는 정치적인 의도와 끊임없는 전시체제가 요구되는 속에서 동원체제가 가동될 때, 극우반공체제와 이승만 권력은 위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¹¹⁶⁾

종전과 동시에 역사적인 서술은 끝을 맺으나 ‘우리의 사명’, ‘우리의 각오’, ‘우리가 지닌 앞날의 숙제’라는 소재목을 따로 구성하여 전쟁은 끝이 났으나 이것은 휴전상태일 뿐이며, 언제 다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른다는 전시체제의 강요와 방일에 대한 언급을 통해 역사교과에 반공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 이후 피폐해진 생활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북의 침략’에 대해 언급하고 다시금 전쟁발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공전 절후의 큰 사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국토는 문자 그대로 황폐하였다. (중략) 도시와 농촌 모두 파괴되었으며, (중략) 고생스런 피난살이를 하지 아니하면 안되게 되었던 것이다. (중략) 정든 옛 보금자리로 돌아와 복구사업에 경주하고 있으나, 아직 전쟁이 그친 것은 아니다. 공산군은 어느 때 어떠한 구실로 다시 남침할지 알 수 없는 것이다.¹¹⁷⁾

6.25동란을 통하여 공산도배들의 행동이 얼마나 잔악하고 무도한가를 우리는 똑똑히 알았다. 약속과 의리를 현 신썩처럼 내 버리는, 그들이 또 언제 우리를, 침범하여, 과거의 악행을 되풀이하고, 우리들의 가정을 파괴하여 지금 우

116) 서중석, 앞의 논문, 119쪽.

117) 신석호, 『국사』, 동국문화사, 1957, 178~179쪽.

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행복을 유린할지 그 누가 보증할 것인가.¹¹⁸⁾

전투는 그치었으나, 전쟁이 아주 끝난 것은 아니다. 공산군은 언제나 침략을 꿈꾸고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어느 때 어떤 기틀로 또 다시 밀고 내려올지는 모르는 형편이다. 우리는 하루라도 방심을 하여서는 아니된다.¹¹⁹⁾

이처럼 ‘북한 괴뢰집단’은 언제라도 전쟁준비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펼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친 뒤 그들이 뒤이어 내세우는 것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의 지배를 받는 북쪽의 ‘우리민족’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과 함께 ‘한민족’의 역사와 우수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도 역시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념에 민족마저 부정당해야 했던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앞서 본 주장이 담긴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주변국에 대한 시각을 볼 수 있다. 먼저 공산주의 세력으로 중국, 소련과 일본¹²⁰⁾에 대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118) 조계찬, 『우리나라 역사』, 백영사, 1956, 250쪽.

119) 이병도, 『중등 국사』, 을유문화사, 1956, 190쪽.

120) 일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공산국가는 아니나. 공산세력과 손을 잡는 위협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장에서 할 것이다.

북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공과 소련은 항상 우리 민족의 공산주의화를 노리고 있으며 남으로는 바다 건너 일본이 아직도 옛날의 침략적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¹²¹⁾

세계의 제패를 꿈꾸며 각지에서 침략을 일삼는 소련의 앞잡이가 (중략) 우리는 일본의 침략 세력을 경계하여야 한다. (중략) 오늘의 일본은 반성하기는커녕 민주세력과 공산 세력의 심한 대립을 이용하여, 다시금 지난날의 동양지배의 꿈을 실현하고자, 그들의 경제력으로써 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침략을 노리게 되었다. 우리는 일본과 이웃하고 있으며, 그들과 손을 잡고 서로 협조하며 부흥하여 그들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감을 바라마지 않으나, 그들이 옛날의 침략의 꿈을 깨지 못하고, 또 새로운 침략적 세력으로 나타나는 한, 우리는 깊은 관심과 조심성 있는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¹²²⁾

과거 40년 동안이나 우리나라를 빼앗고 우리민족을 노예로 만든 일본은 전후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여 군비를 재건하고 공산진영과 음으로 내통하여, 우리나라를 다시 침략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¹²³⁾

이 중에서 일본에 대한 언급은 실로 흥미롭다. 일본을 공산진영과 함께 묶어서 서술하고 있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당시 정국의 상황 때문이었다. 이

121) 이홍직, 『우리나라 역사』, 민교사, 1956, 173쪽.

122) 역사교육 연구회, 『중등 국사』, 정음사, 1963, 166쪽.

123) 조계찬, 『우리나라 역사』, 백영사, 1956, 250쪽.

승만은 반공운동의 일환으로 반일운동을 진행하였는데, 이것은 민중의 강렬한 반일감정에 영합하고, 정부와 자유당의 친일파색채나 자신의 반통일 분단체제 강화에 대한 반발이나 저항을 약화·교란시키고, 이윤배반적이게도 북진통일처럼 자신을 반일 민족주의자로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듯 반일운동을 진행한 것은 일본정부가 이승만의 반공정책에 호응하지 않고, 한국전쟁의 특수경기가 휴전과 함께 곤경에 처하자 정경분리를 내세워 중국·소련과 접근하면서, 북과도 어업협정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정부가 북과 교류하면 적성국가로 선포할 것임을 천명하였고, 자유진영의 배신자로 규정하였으며, 일본의 새로운 군국주의자들이 공산국 군대와 합작하고 있다든가, 일본이 이북 공산당과 합해서 내려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역설하여 위기 분위기를 고조해 학생들과 민중을 반일시위에 동원하였다.¹²⁴⁾ 극단적인 반공주의에 휩싸인 이승만의 입장에서 일본의 행동은 ‘자유진영을 배신한’ 적일 뿐 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공산주의 진영에 대한 서술에 비해 자유진영 국가의 서술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단순히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간의 협조를 서술하는데 여기에서 공산주의 국가는 배제된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에 의해 쓰여진 역사교과에 교육을 받은 학생에게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왔는지 한 지식인의 회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이란 ... 미국덕택에 이룬 것이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소련이란 놈이 나타나서 38선 북쪽을 차지하고 설랑 그 ‘꼭두각시’인 소련군 대

124) 서중석, 앞의 논문, 130~131쪽.

위 김일성을 내세워 괴뢰정권을 세워버리고, 국제연합에서 통일정부를 세우려고 선거를 하자는 데도 소련이 거절하여 결국 남·북이 나뉘어졌다 ... 이 고안 놈의 소련이 북괴를 시켜서 6·25 불법남침을 해 동족을 죽이려드는데 정말 고맙게도 우리 편 미국이 재빨리 도와주어 '민족의 원수'인 북괴를 무찌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¹²⁵⁾

125) 강정구, 「내가 받은 한국사교육 40대: 친미 반공이데올로기로 얼룩진 국사수업」, 『역사비평』, 1991 겨울, 96쪽.

IV. 결론

한국사회는 해방 후 교육분야에 있어 식민교육에서 벗어나 민족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으나 자주적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미군정 지배라는 현실은 자주성 회복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곧이어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맞이하였지만, 분단이라는 새로운 국면은 국사교육의 또 다른 왜곡을 불러오는 계기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교과서의 반공화라는 이념적 편향으로 나타났고, 이런 현상은 동족간의 전쟁을 통해 더욱 심화되었다.

분단정권 수립 후 반공교육은 문교부의 교육정책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구현되었다. 실질적으로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사상검열, 학원병영화를 통한 국가차원에서의 학생통제, 구체적인 교과수업에 있어 교사들에게 전달된 지도요강에까지 국가의 교육통제는 학교생활 깊숙이 간여하였다. 또한, 당시의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특정 사실에 대한 은폐와 왜곡된 서술을 발견할 수 있었고, 따라서 교과내용 역시 지배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당시의 교과서에 실린 대부분의 서술이 서술 주체와 관점을 은폐한 채 교과서에 실려 있는 대부분의 서술은 해석에 의한 것이 아니며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인 것처럼 묘사하여 교과서 내용이 진리라고 여기는 효과를 극대화시켰다.¹²⁶⁾ 따라서 교과서와 교사의 설명에 의지하여 교육을 받았던 당시의 학생들은 편협한 이념적 입장에서 쓰여

126) 김한중, 「역사의 표현형식과 국사교과서 서술」, 『역사교육』 76, 2000, 142쪽.

진 교과서 서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치관 형성에 있어 극단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반세기가 지난 현재 7차교육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선택과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1차 교육과정에서 서술된 역사 교과서에서 지적한 오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서술들이 여전히 나타난다. 이것은 아직까지 역사교육이 정치에 종속되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역사교육은 지배층의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갈등과 대립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지배층은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에 대한 서술에 있어 왜곡되고 편향된 서술을 강요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전쟁을 정당화하는 군국주의적 국가관과 역사왜곡의 유착관계와 결별하고 다양한 역사인식과 역사서술을 인정해야 할 때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사회의 보편적 가치이자, 역사교육이 이루어야 할 중요한 사회적 목표인 평화, 평등,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에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올바른 가치관의 성립과 더불어 인류가 지향해야 할 공동의 가치관을 구현해가는 선결조건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1. 사료 (교과서)

- 신석호, 『국사』, 동국문화사, 1957
역사교육연구회, 『중등 국사』, 정음사, 1960 · 1963
유홍렬, 『우리나라 역사』, 탐구당, 1960
이병도, 『중등국사』, 을유문화사, 1956 · 1960
이홍직, 『우리나라 역사』, 민교사, 1956
조계찬, 『우리나라 역사』, 백영사, 1956
조좌호, 『중등국사』, 영지문화사, 1957
진단학회, 『국사교본』, 군정청 문교부, 1946
최남선, 『국사』, 민중서관, 1962
한우근, 『우리나라 역사』, 상문원, 1956

2. 저서

- 강만길 외, 『우리 민족해방운동사』, 역사비평사, 2000
교육과정·교과서 연구회 『한국 교과교육 과정의 변천-중학교』,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0
김한중, 『역사왜곡과 우리의 역사교육』, 책세상, 2001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 선인, 2006

박현채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상, 하, 역사비평사, 2000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1, 2, 역사비평사, 1996

손인수, 『한국교육사 연구』 하, 문음사, 1998

역사학 연구소, 『강좌 한국근현대사』, 풀빛, 2002

이경섭, 『한국현대교육과정사 연구』 상, 교육과학사, 1997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05

정해구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4』, 한길사, 1985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문교사』, 중앙대학교 출판부, 1974

한국산업사회연구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녹두, 1991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 연구반, 『한국현대사2』, 풀빛, 1993.

3. 논문

강정구 외 4인, 「세대별 증언 - 내가 받은 한국사 교육」, 『역사비평』 1991
 겨울, 1991

강선주, 「해방 이후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둘러싼 쟁점」, 『역사교육』 97,
 2006

강창순, 『한국전쟁기(1950~1953) 사회과 교육 실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
 대 사회교육 석사학위 논문, 2001

고정휴,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했는가」, 『역사비평』, 1991 겨울호, 1991

김남수, 『1950년대 국민학교, 중학교에서의 반공교육』, 성균관대 역사교육

-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03
- 김득중, 「여순사건과 이승만정권의 반공이데올로기 공세」, 『역사연구』 제 14호
-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 『내일을 여는 역사』 제18호, 2004
- 김수자, 『대한민국 초기 이승만의 권력기반 강화과정 연구』, 이화여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4
- 김영교, 『신탁통치 문제에 대한 중등교육과정 교과서 서술 분석』,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김정인, 「해방 이후 국사 교과서의 ‘정체성’ 인식」, 『역사교육』 85 , 2003
- 김진경, 「분단 이후 반공교육의 전개과정」, 『실천문학』 1988 봄호, 1988
- 「전환기의 민족교육」, 『민중교육2』, 푸른나무 ,1988
- 김혜수, 「정부수립 직후 이승만 정권의 통치이념 정립과정」, 『이대사원』 28집, 1995.
- 마석한 「역사교과서와 교과서 분석」, 실학사상연구. 1997
- 박길자, 『교육과정에 반영된 지배이데올로기의 비판적 고찰』,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91
- 박진동, 「해방후 역사교과서 발행제도의 추이」, 『역사교육』 91, 2004
- 박한용, 「‘공황기’ 국내 민족해방운동의 고양과 민족통일전선운동의 굴절」, 『우리 민족해방운동사』, 역사비평사, 2000.
- 서중석, 「이승만과 북진통일 -1950년대 극우반공독재의 해부-」, 『역사비평』 1995 여름호, 1995.
- 신병철 「국정 국가 교과서 개발과정과 국정교과서 제도의 문제점」, 『역사교육』 79, 2001

- 신병철, 「분단시대 역사교육을 넘어서」, 『내일을 여는 역사』 창간호, 2000
- 신혜숙, 『중학교 사회과목 국정교과서에 나타난 지배이데올로기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2002
- 연정은, 「안호상의 일민주의와 정치 · 교육 활동」, 『역사연구』 제 12집, 2003
- 연정은, 「감시에서 동원으로, 동원에서 규율로-1950년대 학도호국단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제 14집, 역사학연구소, 2004
- 윤석수, 「조선공산당과 6 · 10 항일 시위운동」, 『역사비평』 1989 봄호, 1989
- 이광호, 「미군정기의 교육」, 『분단시대 한국교육』, 푸른나무, 1989.
- 이관후, 『국가형성기의 한국 민족주의: 한국전쟁과 통치이념의 변화 - 일민주의에서 반공주의로』, 서강대 석사학위 논문, 2002
- 이병희, 「국사교과서 국정제도의 검토」, 『역사교육』 91, 2004
- 이신철, 「국사교과서 정치도구화의 역사 -이승만, 박정희 독재정권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97, 2006
- 「6·25 남북전쟁시기 이북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 『역사와 현실』 제54권, 2004
- 이준식, 「한국근대사에서 사회주의계열 민족해방운동의 역사적 실체」, 『내일을 여는 역사』 제24호, 2006
- 장원석, 「신탁통치안의 기원과 왜곡」, 『내일을 여는 역사』 제 23호, 2006
- 정미숙, 「단정수립 후 한국전쟁까지의 교육」, 월간 우리교육, 1991
- 「한국 문교정책의 교육이념 구성에 관한 분석」, 『분단시대 한국교육』, 교육출판 기획실, 푸른나무, 1989,
- 정선영 『역사교육 이론의 변천: 성과와 과제』, 『역사교육』 97, 2006
- 정영태, 「일제말 미군정기 반공이데올로기의 형성」, 『역사비평』, 1992 봄호, 1992

조성훈, 「왜 이승만은 휴전협정에 반대했을까?」, 『내일을 여는 역사』 제21호, 2005

지수걸, 「통일을 위한 남북 교과서 분석 - 역사교과서」, 『역사비평』, 2001, 여름호

최명경 『김인정제 하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분석: 이승만, 박정희 정부에
대한 서술내용을 중심으로』, 울산대 석사논문, 2004

최용규, 『한국사회과에서의 민족의식 교육』, 한국 교원대 박사학위 논문,
1994

한준상, 정미숙, 「1948~53년 문교정책의 이념과 특성」, 『해방전후사의 인식
4』, 한길사, 1985

홍석률,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과 냉전외교정책」, 『한국사연구』, 1994

Abstract

The Anti-communism Ideology Education of Rhee Seung-man Region and 'History Textbook of Korea'

Hae kyung, park

Major in Histor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Sungshin Women's University

After gaining the independence from the colonial ruling of Japan, Korea had encountered the opportunity for independent national education. However, Korea was unable to realize the education to enhance the national independency by indiscrete introduction of 'American-style education system' within the US military governance system that began with the stationing of military forces of the US and the USSR, and copied down of the colonial education system under the policy of 'maintaining the status quo' that disregarded the feverish hope of people on education reform.

The education reform could not be materialized under the single government established with the structural vulnerability and instability due to the conflict of left wing and right wing surrounding the trust governance. Rather, the Rhee Seung-man regime introduced the 'anti-communist ideology' to justify the

their ruling, and this was led to the establishment of student military force, ideology control through the re-education of faculty, and control on education like the implementation of the military training. Under the special situation of war that was broken out after the national founding, the anti-communist ideology had taken the official national control. The government was outspoken in its injection of the anti-communist ideology into education and this was clearly shown in the education policies and academic policies.

Looking into the education policies and academic policies after the war, they emphasized the anti-communism, ethics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health and sanitation education in common. This was emphasized in the textbooks, and in particular, it was emerged in social life, history and current affairs education, and the state controlled to the contents that classroom was supposed to handle, and it was used as a mean to control the students.

The history course that was supposed to base on concrete facts was unable to deviate from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and this was shown as concealing, distorting and others on the specific facts. The representative descriptions are the description that excluding the socialist force in the history of independent movement under the Japanese ruling, description that the right wing-oriented ideology on the trust government issue that had the extreme conflict in ideology after the liberation, description that turned the responsibility to the left wing force and the USSR in the issue of national division, and the description that display the position of the regime at helm

such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Korean War and truce agreement, theory of northern invasion for unification and others.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history education itself is to teach the criticism and decision making on the objective interpretation on the past fact, such a prejudicial ideological view in the textbook would cut off the students to have the opportunity to keep the unique view and cause them to form the extreme way of thinking with respect to forming their values.

After a half of century from then, looking into the content of the 'Modern History of Korea' textbook, an elective course in high school, it still contains the description not significantly broken away from the description of the history textbook at the time of description in history textbook at the time of primary education process. This is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the history education is yet to be free from the political interest relationship.

However, this is the time to recognize various history recognition and historic description by breaking away from the ideology shade like the distorted history description following the political interests. By doing so, it would take the step toward the peace, equality, human rights and democracy, the important social goals for history education to achieve as well as the general value of the human society.